

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보조율이 지방자치 실시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많았던 지금의 현실에도 적실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지역특성과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에서는 경제적 관점 외에 사회적 정의 접근을 추가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등보조, 전액보조, 현물대체 부담 등 예외적인 지방비 부담조치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균등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이상용, 2007)

3)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본인도 소요재원의 일정부분을 분담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사회안전망의 확보차원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현금보조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통합되고 적극적인 자기 노력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생산적 복지나 근로연계복지의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에서 일정수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 권리의식을 고양하고 정부 돈은 공짜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점을 가진다.(이재원, 2007) 우리의 경우 빈곤과 질병이라는 전통적 사회위기 외에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기 현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IV. 한·미 FTA -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대응전략

FTA(Free Trade Agreement)라 함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칠레, 싱가포르와는 이미 체결하여 발효 상태이고 일본, 캐나다, EU와는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다. 한·미 FTA는 지난 '07.4.2일에 타결되어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 대응전략을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고자 한다.